

野, 인권위 국감서 “이태원 사고 대신 ‘참사’ 권고해라”

“굳이 ‘사고’, ‘사망’이라고...책임 최소화 의도” 송두환 “비참한 사고 줄이면 참사...상의할 것” 野, 이태원 특조위 건의 등 적극적 역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을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김수홍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때의 분향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합동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되었는지 아시나.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정부 합동분향소인지도 명기가 없고 ‘사고 사망자’로 돼있다.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인권위가 정부에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면 상임위원들과 협의해 분향소 명칭부터 바꾸라”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권고사항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분향소 명칭이 참사에 대한 정의와 희생자 인권과 관계가 된다”며 “분향소 명칭 혹은 이태원 참사 정의를 이태원 사고로 보고 있다. 사고가 아니라 참사가 맞지 않냐”고 질의했다.

송 위원장은 “비참한 사고를 줄여서 얘기하면 참사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또는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 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외신은 디재스터(참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정부만 인시던트(사고)로 표현해 난리가 났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인권위 차원에서 검토해 인시던트(사고)로 내보낸 정부 이방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참사 희생자분들을 굳이 사고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용어사용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수정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송 위원장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건의 등 인권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김수홍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국민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한테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며 “희생자, 유가족, 국민 전체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인권위가 정부한테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의 요구에 송 위원장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그런 움직임은 있지 않을까”라며 “말하신 부분을 포함해 저희끼리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참사 현장의 사진과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됐다”며 “축제 참석 자체가 문제라며 희생자를 비난하는 글이 SNS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근본 원인을 가리고 피해자의 자학을 일으키는 폭력행위인데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경찰을 투입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은 안 된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과 ‘축제가 아닌 현상’,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발언을 두고 “국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국민에게 굉장히 큰 상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지침, 발언 등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태도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너무 소상한 보도 영상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단어의 선택은 내심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용어는 한 쪽으로 통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가 세월호 때도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국민 인권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

수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 빠르게 입장을 정리해 견해를 밝히고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참사 4시간 전부터 11건의 신고 접수가 들어오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 그 이전에 비하면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도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는 것이 인권의 가장 큰 가치 아니겠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어느 과정에 가야 인권위에서 역할을 할 것이냐. 인권위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며 “인권위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이장섭 의원은 “이 문제는 국민이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로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데에서 부터 출발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사고, 사망자, 주회 측이 있다 없다는 어떤 프레임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바라볼 수 있게 인권위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역할을 촉구했다.

최이슬기자

서동욱 전라남도지사 “민간인 학살 잘못된 역사 바로 잡아야” 강조

제6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라남도 합동위령제 참석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1일 오후 2시 장흥군민회관에서 거행된 제6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라남도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유족들의 가슴 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이날 추모사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비극이 발생하지 올해로

72주년이 되었다”면서 “민간인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무고하게 집단 희생된 역사적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지난날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앞날을 기약할 수 없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의 역사가 다시는 이 땅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자료 발굴과 추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라남도의회에서도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학살 피해의 진상규명과 배상·보상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韓 총리, 외신간담회 ‘농담’ 논란에 “국민 마음 불편...사과드린다”

공보실, 한 총리 발언 비판 여론에 해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농담으로 논란을 빚는데 대해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해당 논란과 관련한 한 총리의 입장을 전했다. 공보실은 “한 총리는 외신 브리핑 현장에서 정부의 책임과 균중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동시통역기 불륨이 낮아 외국인 기자들이 통역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곤란해 하자 한 총리가 기술적 문제로 회견이 지체되는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경위와 무관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는 전날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외신기자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뭐가라고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통신오류로 통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자 한 총리는 “이렇게 잘 안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없나요”라고 했다.

기자의 질문에 빚낸 농담으로 해석 되지만 참사의 심각성에 비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